광주시, 10년간 나무 3000만그루 심는다

3900억 투입 2027년까지 '시원한 도시, 광주' 프로젝트
열섬현상 줄이고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해소 총력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광주'와 '아프리카'를 합친 '광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도심 열대야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가 3900억원을 들여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광주시는 27일 "오는 2027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시원한 도시, 광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나무심기는 10년 프로젝트로 매년 390억원을 들여 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예상 사업비는 공공부문 재정사업 2210억원, 민간 부문 1690억원 등 모두 3900억원이다.

특히 광주는 분지 형태의 지형적 특성으로 대기 흐름이 정체되고 건물들이 밀집·고층화하면서 바람길이 차단되는 등 도시 열섬과 미세먼지 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올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로 많은 40일 이상 지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했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흡착 기능이 뛰어난 큰 나무 중심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기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도 전개한다.

광주시는 도심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입체녹화 225만㎡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180ha 조성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거점공간별 녹지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심입체녹화 225만㎡ 조성사업은 도로변 옹벽·건물 벽면·옥상에 담쟁이 등 벽면녹화와 함께 부직포와 화분을 이용한 투자비용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신개념 옥상녹화 등 입체녹화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도로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녹지기능 강화용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등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용 수목을 복층으로 심는 프로젝트다.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을 통해 도심 자투리 공간, 골목길 나대지 등에 수목을 심고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거점공간별 녹지확대는 학교 등에 명상숲 조성, 아파트 등 바람길을 막고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보행자 전용도로와 가로경관에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간 4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난 2002년부터 2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지만 광주시의 녹피율은 2015년 현재 36.26%에 머물고 있는 등 실효성 논란도 낳고 있다. 나무 심기의 정확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관리없이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동구 인구 16만명 이상 유지 유력 검토

자치구간 경계조정 보고회
의견 수렴 10월 최종 결정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의 인구를 최소 16만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이 추진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의 자치구 경계에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간보고회는 김병완 준비기획단 위원장(광주대 교수) 주재로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연구책임자 박종관)가 마련한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시안'을 보고하고, 참석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기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시안을 마련하는데 지역형평성, 자연지리성 등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내외 사례분석, 자치구별 현지면담 등과 인구규모, 자연 지리성, 생활 편의성, 역사 정체성, 중장기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안 1은 '소폭조정'으로 북구의 일부분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동구의 인구가 현재 9만6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북구는 44만3000명에서 37만6000명으로 조정된다.

시안 2는 '중폭조정'으로 북구 및 광산구 일부분을 동구와 북구에 각각 편입하는 안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동구 16만3000명, 북구는 44만3000명 현행유지, 광산구는 41만6000명에서 34만9000명으로 감소된다.

시안 3은 '대폭조정'으로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인구는 동구 20만5727명, 서구 36만5,775명, 남구 25만9888명, 북구 40만958명, 광산구 25만2701명 등으로 배분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철신 전 도의회 의장 내정

전남도는 제7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김철신(60)씨를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 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뒤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등 5개 분야 면접을 거쳐 이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해 전남도에 추천했다.

전남도는 면접심사 점수가 가장 높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 리더십과 경영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김철신씨를 사장 임명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김 내정자는 순천 출신으로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집행위원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조합위원회 의장, 도의회 4선 의원 및 의장,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호남스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오는 9월 5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중에 임명될 예정이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태풍 피해 현장 찾은 평화당 지도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최고위원들이 27일 신우철 완도군수(맨 왼쪽)와 함께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를 찾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복 양식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완도군청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정동영 "태풍 피해 완도 전복양식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정동영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7일 완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살핀 뒤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완도군청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복값이 반토막 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폭염에 태풍 피해까지 겹쳤다"며 "모든 당력을 기울여 완도 어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군에서 신속하게 밟으면 평화당이 적극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년마다 반복되는 태풍에 대비해 현재 완도 양식어가 기준 43.9%인 재난재해보험 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조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태풍 대비에 가장 든든한 것은 재난재해보험을 드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 자부담금 지원을 한차례 올려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97%는 전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완도에 약 70%가 있다.

정 대표는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 탕감, 전복 먹이인 다시마 역시 피해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

전남도의회 전국 첫 폭염피해 예방 조례 만든다

최선국 의원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녹화, 지붕채색(쿨루프),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 등 폭염 취약 계층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찰, 관리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폭염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규제 개혁·SOC 확충…전남 투자 1번지 만들 것"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규제 개혁, SOC 확충,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등 창업·투자 환경을 혁신해 국내외 기업이 믿고 찾아오는 '투자 1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5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27일 전남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다.

윤 신임 부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도정 방침에 맞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 산업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 출생인 윤 부지사는 광주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교육과학예산과장·재정제도과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재정 전문가로 오랜 경험과 중앙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해 민선7기 들어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정무부지사로 적격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